

법사위 이견 못 좁힌 여야...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속도” 국힘, 의총 열고 대응·투쟁방안 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결국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를 통해 선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되,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해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법사위를 지켜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일념”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의장과 함께 본회의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개최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당부로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차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불발 직후 기자들에게 “지난 6월 12일부터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여야 협의도 불발로 끝났다”며 “여전히 민

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저희 당(국민의힘) 역시 수차례 걸쳐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지 않는 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개최한다고 하니 저희 당(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전 다시 협상을 제안할 경우에 대해서는 “협이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한병도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내일부터 당장 쌓여있는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에 특히 속도를 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바로 응답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었다. 국회가 공전(空轉) 상태였다”

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당장 내일부터 국회를 전면 가동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본회의의 전 여야 간 추가 협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선 “이미 (본회의) 시간이 공지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추가 협상에 대한) 열의가 없을 것 같다”고 못 박았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고, 2주 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원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李 “호남 투자, 지역특혜 아닌 균형발전”

“누적 격차 고려하면 조속지혈 불과 기업 결단,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번호에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속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전날(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을 갖고 지역 차별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때마침 AI(인공지능)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해와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최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어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 가동... 친한계 징계 수순

張 “지도부 흔드는 행위, 조치 필요” 이르면 6일 징계 요청안 검토

조건부 사퇴론까지 일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국면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던 당 윤리위원회의 강경한 대응이 전망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르면 6일쯤 회의를 열어 그간 접수된 징계요청서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선거 이후 장 대표 사퇴 요구에 앞장섰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등이 대상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행위 논란도 많았다.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이 있었다. 미뤄 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며 징계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엔 조지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한 당직자와 텔레그램으로 징계 대상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선거 지원, ‘당대표 등에 대한 막발 비하성 발언’ 등이 징계 대상 행위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공보국은 공지로 “강 조지부총장 문자 메시지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받는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해당 의원의 입장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중오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징계를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우리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시스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지원)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MB C라디오에서 “우리 당 지지층도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며 “그것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그것을 징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선관위 국조특위, 내일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7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방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가동된 가운데, 국조특위 소속 여야위원들이 오는 2일 오전에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을 방문해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오는 2일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일에는 서울 송파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고,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송파선관위를 방문해 거기서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향해 “국회가 국정조사 차원에서 현장에 방문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니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저희는 개표소까지 들어가 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시위대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7일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임오경·전용기 의원이 현장을 찾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시위대에 막혀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난 16일 이곳을 찾아 경찰·체육단체·시위대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점거를 풀지 못하고 복귀한 바 있다.

/뉴스시스